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20주년 기념회의

참 고 자 료

통일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과제

일시 2009.9.10(목), 13:00~18:00 장소 서울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 (별관 지하2층)

주최 KINU 통일연구원 후원 통 일 부

행사개요

13:00～13:30	등　　록	
13:30～13:30	개 회 식	
	개 회 사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축　　사	현인택 (통일부 장관)
	기조연설	이홍구 (통일고문회의 의장)
14:00～16:00	**[제1세션]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채택 회고와 평가**	
	사　　회	안병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발　　표	**국정철학** 김학준 (동아일보사 회장)
		국내정치 박관용 (전 국회의장)
		대외정책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
		대북정책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종합토론	이홍구 (통일고문회의 의장)
16:00～16:30	Coffee break	
16:30～18:00	**[제2세션] (라운드테이블)한반도 통일비전과 정책과제**	
	사　　회	안병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토　　론	이홍구 (통일고문회의 의장)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김학준 (동아일보사 회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

목 차

1.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1

2. 민족공동체통일방안 13

3. 이명박 정부 통일정책 22

1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노태우대통령 국회특별연설 (1989.9.11)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147회 정기국회의 개회를 축하합니다.

이번 국회는 파란과 성취가 교차한 1980년대를 마무리 짓고 희망의 90년대를 여는 뜻 깊은 정기국회라고 생각을 하며,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많은 결실이 이번 국회에서 거두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이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 민족사의 소망이며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실현할 방안을 밝히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시련으로 시작된 20세기를 영광으로 마무리지어야 할 이 세기의 마지막 연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세기에 들어서면서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힘이 모자라 끝내 나라를 잃고만 우리 민족은 해방의 날을 맞았음에도 그 불운의 연장선상에서 국토분단과 동족상잔의 엄청난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모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혜와 힘을 모아 민족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길을 열어 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양단한 이 분단의 아픔은 우리들 다음 세대, 다음 세기로 넘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겨레의 뜻과 열망을 한데 모아 통일의 횃불을 높이 들고 민족통일의 길을 힘차게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이야말로 우리의 넘치는 민족적 역량으로 통일의 길을 열수 있는 역사적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정치·경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이제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당당한 힘을 쌓았고 그것을 실천할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북한의 전면남침으로 불바다가 되었던 잿더미 위에 일어나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세계 10대 무역국가에 들어선 신흥 산업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민주주의의 새로운 활력 속에 서울올림픽을 사상 가장 훌륭한 대회로 치루었습니다.

동서와 남북 세계 160개국의 젊은이들이 이념과 체제, 인종과 종교의 벽을 넘어 서울의 한마당에 모인 이 인류화합의 대축제는 국제질서 속에서 피동적인 존재로 비켜 서있던 우리 민족이 세계에 화해의 물결을 주도한 위업이었습니다.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이같은 성취에 힘입어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류·협력하는 적극적인 관계를 이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 동구 사회주의 국가안에서 일고있는 개방과 개혁의 물결은 그들 내부체제와 정책의 변화는 물론, 국제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몰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단을 안겨주였고 그것을 40여년 고착시켰던 세계의 질서와 힘의 구조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같은 거대한 안팎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기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작년 7월 남북한이 더 이상 적대·대결하는 상대가 아니라 공동의 번영을 향해 협력해가는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상을 전 세계에 밝혔습니다.

북한을 폐쇄와 고립으로부터 개방으로 이끌어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를 이룩하고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우리의 정책은 동서 세계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40여년의 세월 동안 우리 스스로와 세계를 바꾸어 놓은 이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장애가 통일의 길목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한반도를 가르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으며 긴장과 대결은 늦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천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네 번을 거듭하여도 북한을 지배해 온 경직한 체제는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화의 거대한 물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쪽을 공산화 함으로써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기본전략이나, 모든 것이 통제된 북한사회 내부도 아직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열정은 뜨겁지만 우리가 맞고 있는 분단 현실은 이처럼 냉엄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북한은 도도한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이 도달하는 마지막 해안이 될른지는 모르나, 결코 이 물결을 끝내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폐쇄노선에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북한은 변화의 물결에 순응하여 끝내는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앞당겨 지도록 돕고 또 이끌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인내, 얼마나 많은 땀, 우리 겨레의 슬기와 뭉친 힘이 얼마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쏟아 그들이 통일의 길로 나오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작년 10월 4일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겨레의 뜻을 모아 새로운 정세변화에 부응하여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밝히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국민들의 광범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고, 국회공청회를 거쳐 겨레의 소망을 실현할 새로운 통일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있는 엄숙한 의무에 따라 저는 남북이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의 중간과정을 거쳐서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밝히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통일된 우리의 조국은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합니다.

민족성원 모두의 참여와 기회균등이 보장되고 다양한 주의·주장이 자유로이 표현되고 대변되는 민주공화체제는 온 겨레의 오랜 소망이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통일된 나라의 유일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일된 조국에서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집단, 어느 계급도 특권이나 주도적인 지위를 누리거나 독재로 전횡하는 일을 용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된 조국은 민족성원 모두의 복지를 증진하며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을 보장하면서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관계를 이루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리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통일된 우리나라는 단일국가여야 하며, 이것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 개의 나라를 영속시키는 형태는 온존한 통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는 원칙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통일은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과 북이 분단 40여년간 누적된 깊은 불신과 오랜 대결 적대의 관계를 그대로 두고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분단이 있기까지 5천년의 긴 역사를 통해 한 핏줄, 같은 언어, 같은 문화전통, 그리고 같은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왔습니다.

이 민족공동체야말로 현재도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바탕이며 우리민족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당위이자 이를 보장하는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분단은 좌우익 간의 유혈투쟁과 6.25 남침으로 인한 동족간의 처절한 전쟁을 겪으면서 민족의 분열로 심화되어 왔습니다.

적대하는 두 체제로 나뉘어 반세기 가까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북이 겨레는 생활양식과 가치관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족공동체를 올바로 회복·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먼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공영하면서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간에 개방과 교류·협력을 넓혀 신뢰를 심어 민족국가로 통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남북간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정치적 통합의 여건은 성숙될 것입니다. 통일을 촉진할 이 과정을 제도화하기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헌장에 따라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합체제 아래에서 남과 북은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토록하여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보다 가속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는 중간과정의 과도적 통일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남북연합은 최고 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쌍방 정부대표로 구성된 '남북각료회의'와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남북은 각료회의와 평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합의사항 이행 등 실무를 위해 공동사무처를 두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를 파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사무처를 비롯한 남북연합의 기구와 시설을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구역을 만들어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구역은 점차 '통일평화시'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하여 각각 10명 내외의 각료급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 인도,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분야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간의 모든 현안과 민족문제를 협의·조정하고 그 실행을 보장하되 구체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으로는 1천만 이산가족의 재결합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외교분야에는 남북간에 정치적 대결상황을 완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민족역량의 쓸모없는 낭비를 막으며 해외동포의 권익은 물론 민족적 이익을 함께 신장시킬 것입니다.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우선 남북사회의 개방과 다각적인 교류·교역·협력을 추진하고 민족문화를 다 함께 창달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번영의 경제권을 형성하면 남북 모두 발전을 이루고 민족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분야에서는 과도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휴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 나아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평의회'는 100명 내외로 쌍방을 대표하는 동수의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되, 통일헌법의 기초와 통일을 실현할 방법과 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남북각료회의의 자문에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평의회'는 통일헌법의 기초과정에서 통일국가의 정치이념·국호·국가형태 등을 논의하고,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정부형태는 물론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 시기절차 등을 토의하여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은 각기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남북평의회'에 내놓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헌법 초안이 마련되면,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하고,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통일조국의 국회는 지역대표성에 입각한 상원과 국민대표성에 입각한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여 통일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저는 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우리 겨레의 이상과 의사에 맞고, 남북의 현실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새 공화국 출범 이후 저는 남북간에 화해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 남북의 정상이 서로 만나는 것임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열려 본격적인 남북협력과 통일의 시대를 열 헌장에 합의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헌장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안, 상호불가침에 관한 사항, 통일의 중간단계로서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담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루속히 이같은 민족공동체 헌장이 마련되어 온 겨레 앞에 공포되기를 기대합니다.

분단 45년이 되는 내년 8월 15일까지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돌파구를 우리는 반드시 열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사에 통일을 이룩하는 새로운 장을 펼쳐 우리 세대에게 부여된 역사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루었던 유럽의 여러 민족과 국가들은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함께 번영을 일구는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프랑스·서독·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공동체 국가들은 지난 날의 적대와 대결을 동반자의 관계로 바꾸어 1992년 완전한 경제통합체를 이루며 정치적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의 지배 아래서도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지켜왔던 우리가 분단의 벽을 넘어 수 천년 이어온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들도 자유와 인권의 폭을 넓히며 다양한 의사를 대표하는 복수정당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이념과 체제를 떠난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나는 민족의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우리 북한동포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들이 이같은 조처를 취하지 않고는 개방의 길로 나설 수도 없고, 우리와 교류·협력·연합하여 민족공동체에 합류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은 말로만 평화통일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적화통일 노선을 실질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자주·평화·민주적 통일의 길은 열릴 수 없습니다.

나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할 이 같은 일을 실천할 경우 남북한 관계에 새로운 기원을 여는 조처를 취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분단의 장벽이 높고 두터운 만큼 통일의 길은 험난합니다. 분단의 고통과 비극이 큰 만큼, 그것을 가시게 하는 데는 우리의 더 큰 역량과 지혜, 무한한 참을성과 피땀을 쏟아야 합니다.

이 모든 준엄한 현실을 외면한 안일한 환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은 조국의 통일이 아니라 겨레의 더 긴 시련일 뿐입니다.

민족문제를 해결할 통일에 관한 한, 우리의 내부적인 이견과 갈등, 반목과 분열은 민주주의의 거대한 용광로 속에 녹여 무쇠와 같은 민족의 통일의지를 창조해 내어야 합니다.

민주번영으로 우리의 통일역량이 더 한층 커질 때 분단의 벽은 무너질 것이며, 겨레의 단합된 힘이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입니다.

온갖 고난을 이겨내 오늘의 발전을 이룩한 겨레의 보람 위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가장 훌륭한 올림픽이 이 땅에서 열렸듯이, 온 민족의 지성이 응집되어 통일의 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온 겨레의 염원을 담은 통일방안을 밝히면서 통일의 빛나는 그날을 여러분과 함께, 7천만 동포 모두와 함께 힘차게 열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김영삼 대통령 제49주년 광복절 경축사 (1994.8.15.)*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제49주년 광복절을 국민과 더불어 경축합니다.

문민정부 출범후 두 번째 광복절을 맞아, 우리는 과거 어느때 보다 조국의 장래에 대해 희망과 용기에 차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변화와 개혁, 개방과 전진을 향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깨끗한 정부를 바탕으로 국가경쟁을 강화해 왔습니다.

상해 임정청사를 복원하고, 애국선열들의 유해를 고국땅에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그 어느때 보다 확고해졌습니다.

민족의 정기는 되살아나고 있으며, 우리는 민족진운의 역사를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맞추어, 새로운 문명의 중심축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아시아·태평양시대, 새로운 문명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언제까지나 헤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뜻과 원기를 한군데로 모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되어, 새로운 문명을 선도하는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

* 김영삼 대통령 제49주년 광복절 경축사 中 발췌

7천만 내외동포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7천만 민족의 안전과 생존, 그리고 통일과 번영에 대한 책임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7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책임을 통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사와 남북관계의 흐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나는 통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자 합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우리는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광복은 민주주의가 꽃피고, 번영이 넘치는 통일된 나라를 이룩할 때 완성됩니다.

세계사는 이미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선언하였고, 우리는 현재 민주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오랫동안 민주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민주주의의 기틀이 이 땅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이렇듯 어렵게 확립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수호될 것입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통일을 추진하는 우리의 기본철학 역시 자유와 민주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없는 민주가 있을 수 없고, 민주없이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자주적 역량으로 냉전과 분단을 극

복하고,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해야 합니다.

통일은 어떻게 권력을 분배하느냐보다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 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통일은 계급이나 집단중심의 이념보다는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은 가공적인 국가체제의 조립보다도,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공동체 건설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일은 오직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전복을 통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합이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아래서 반복과 불신을 쌓아온 남과 북이 하루 아침에 통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하나의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해 '화해·협력단체', '남북연합단계'를 거쳐서, '1민족 1국가의 통일 국가를 완성'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남과 북은 적대와 대립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예멘이 정치적 통일을 이루고도 내전을 치룰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화해와 협력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외형만의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존공영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남북연합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과 북이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킴으로써 정치적 통합을 위한 여건을 성숙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은 통일의 중간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1민족 1국가로 통일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통일의 길은 민주와 번영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된 조국은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내외동포 여러분!

이제 한반도에서도 냉전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체제경쟁도 이미 끝났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실험이 실패로 귀결된 20세기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와 인류는 이미 냉전 대신에 자유화, 복지화,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대세 앞에 한반도만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구시대적 대남 적화전략을 마땅히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을 개선하는 과감한 개혁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산가족문제를 기본적인 인권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 억류자 문제의 해결에도 지체없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허한 이념의 대결 대신에 민족의 복리증진을 남북관계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은 시대의 변화를 읽고,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를 하나씩 갖추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정권 탄생이후 처음으로 권력승계 작업을 진행하는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안정 속에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오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국정부와 국민은 같은 민족으로서 할 수 있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이 협력 속에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여,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때, 자연스러운 통일, 바람직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결코 민족공동체의 선진국 진입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창의와 능력을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첫걸음은 신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신뢰는 서로가 약속한 것릉ㄹ 성실하게 실천에 옮기는 데서 생겨납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세계와 민족 앞에 그 실천을 약속한 화해와 협력의 대장전입니다.

지난 1년여동안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 핵문제의 해결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준수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남북간의 화해 분위기를 위배하는 상호비방은 중지되어야 하며,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 속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북한의 고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을 무기로 하는 폐쇄지향의 모험을 중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비롯한 평화적 핵에너지의 개발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첫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이 언제, 어떻게 오더라도, 통일은 결국 남과 북의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 발전시키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사회로부터 모범적인 민주공동체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에의 영광과 환희뿐만이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고통과 희생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의 문제는 곧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의연하고도 한결같은 자세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내외동포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반세기를 돌아볼 때, 우리는 벅찬 감동과 함께 부끄러운 반성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그리고 남북에서 우리 민족이 걸어온 고난의 역정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내년에 맞는 광복 50주년은 우리 민족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나는 광복 50주년을 한마음 한뜻으로 '7천만의 한민족 시대'를 여는 계기로 삼을 것을 내외동포 앞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민족은 식민시대의 압제를 뚫고 민족의 광복을 성취해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해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냈습니다.

그 연장선 위에서, 이제 우리는 민주와 번영이 넘쳐 흐르는 통일조국, 신한국

을 마침내 창조해내야 합니다.

선열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 피를 흘린 것처럼 우리는 제2의 광복을 위해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선열과 우리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꿈꾸어 왔던 통일이되고 번영된 조국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새로운 세계문명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제2의 광복을 위해서 우리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

우리 모두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3

이명박 정부 통일정책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2008.2.25)*

남북통일은 7천만 국민의 염원입니다.
남북관계는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습니다.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비핵 개방 3000 구상'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이 3천 달러에 이르도록 돕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족을 위하는 길이고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7천만 국민을 잘 살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서로 존중하면서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라면,
남북 정상이 언제든지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

*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中 발췌

제 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사 (2008.8.15)*

"세계로 뻗어가는 통일 한국의 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60년을 여는 오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남과 북 8천만 겨레가 하나 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꿈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고
나아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의 중심에 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환태평양권은
세계 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과반이 몰려있는 유라시아는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 세계 무역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유라시아-태평양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해양과 대륙이 연결되어
한반도는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닷길, 땅길, 그리고 하늘길로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번영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부산에서 화물을 싣고 대륙횡단철도를 따라
중앙아시아, 서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해양시대와 대륙시대를 동시에 열면서

---

* 제 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사 中 발췌

통일한국은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저는 그 꿈을 8천만 겨레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을 우회하거나 뛰어넘고 싶지 않습니다.
남과 북 모두가 함께 잘사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불신과 갈등의 원천이 되는 핵무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상생과 공영의 기회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부시 미국대통령과 만나서
"북한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함께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감스러운 금강산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 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놓쳐서는 안 될, 변화의 호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6자회담과 국제협력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혼자 꿈을 꾸는 것은 꿈에 그칠 수 있지만
8천만 겨레가 같은 꿈을 꾸면 그것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이 하나가 되면 이토록 위대할 수 있음을
후손들에게 보여줍시다.

제 64주년 광복절 경축사 (2009.8.15)*

"이제는 대화해야 할 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포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저는 북한 당국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핵무기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장래를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북한이 그런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입니다.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

* 제 64주년 광복절 경축사 中 발췌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남북간 재래식 무기의 감축도 논의해야 합니다.
불과 4km를 사이에 두고 이토록 중화기와 병력을
반세기 이상 집중시키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눈앞에서 총부리를 겨누면서
어떻게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기와 병력을 서로 줄이고, 뒤로 물러서야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북이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면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는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일으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두고
남과 북이 만나서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 구축

이명박정부는 분단된 조국을 정치적 · 인위적인 접근이 아닌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20세기의 의제인 '냉전구조의 해체' 논리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21세기 전략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과 '통일의 비전'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 한반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구조를 모색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 및 각국의 한반도전략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변국과의 선린관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구조의 수립을 지향하겠습니다.

이명박정부는 화해 · 협력, 평화공존, 점진적 통일을 지향합니다.

1994년 국민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화해와 협력·평화공존·점진적 통일을 지향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남북관계의 특수성, 남북한 간 상이한 정치경제체제와 상호 정치군사적 신뢰부족 및 현격한 경제격차 등을 고려하여, 한반도 통일은 점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이념의 틀에 갇힌 좁은 시각을 지양하고, 포괄적이고 열린 시각에 입각하여 국민여론의 통합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명박정부의 통일기반 구축 방안은

(1)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적극 대처하여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2)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하여 민족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3)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번영권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의 정치적 통일'이 가능한 환경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 미·일·중·러와의 우호적 협력관계와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안보체제의 구축, 남북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창출됩니다.

'남북경제공동체'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의 토대 위에서 북한주민의 3천달러 소득수준 경제를 달성하고 남북한 간에 자본, 노동, 서비스 이동의 자유화를 이룸으로써 구축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족공동체 통일'은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세계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는 선진민주복지국가를 여는 것입니다.

출처 :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은 이렇습니다.(2008)

Memo

통일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과제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20주년 기념회의 참고자료

Memo

통일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과제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20주년 기념회의 참고자료

Memo

통일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과제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20주년 기념회의 참고자료

Memo

통일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과제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20주년 기념회의 참고자료

Memo

통일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과제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20주년 기념회의 참고자료

Question

통일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과제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20주년 기념회의 참고자료

Question

통일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과제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20주년 기념회의 참고자료